

박노황 해임이 연합뉴스 바로세우기의 첫 책무다

- 제5기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임명에 부처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5기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진을 임명했다.

뉴스통신진흥회는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의 대주주로 사장 추천을 포함해 경영의 관리·감독권을 가진다. 따라서 새로운 이사진의 책무는 연합뉴스의 공정 보도 시스템을 무너뜨린 이들 적폐 인사에게 책임을 묻고, 정상화의 길을 이끄는 것이다.

연합뉴스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 공영방송과 함께 무너지고 망가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가 지난해 초부터 적폐 청산 등 연합뉴스 바로세우기 투쟁에 나섰지만 적폐 인사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박근혜 정권 아래 공정 보도를 망친 부역 언론인의 명단을 지난해 발표했다. 여기에 이름을 올린 박노황은 지난 3년간 연합뉴스를 공정 보도 시스템을 망친 장본인임에도 아직도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정상화의 길에 적폐 인사 퇴진은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선결 조건이다. 그러므로 새 이사진은 가장 먼저 박노황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해야 한다.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진은 또 연합뉴스 공정성 회복을 위해 어느 때보다 엄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새로운 사장 선임 절차에 나서야 한다.

연합뉴스지부는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새 사장 선출에 필요한 요건을 밝혔다. 땅에 떨어진 신뢰와 공정 보도 시스템 복원 등 연합뉴스를 바로세우기에 가장 적합한 능력과 자질, 비전을 갖춘 인물을 공개적으로 검증해 사장으로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고민에서 나온 구성원들의 당연한 요구다.

돌아보면 뉴스통신진흥회는 지난 시기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며 밀실에서 사장을 뽑고, 그렇게 자리에 오른 경영진이 연합뉴스를 망쳐왔다. 지난 10년간 연합뉴스가 공정성을 잃은 책임을 결코 비껴가려 해선 안 된다. 이는 직무유기이자 촛불 시민이 요구한 언론 개혁을 외면하는 일이다.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새로운 이사진은 뉴스통신진흥회의 지난 과오를 돌아보고, 지금 당장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이 부여한 책무를 철저히 이행하라.

2018년 2월 8

전국언론노동조합